# 필리버스터 정국에 민생입법 지연… 이달 처리여부 '주목'

**오는 15일 본회의서 주요법안 처리**
**2차 종합특검에 대치 지속될 수도**
**반도체특별법 등 조속 처리해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가 지난해 말부터 각종 쟁점 법안들로 대치하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정국으로 본회의 일정을 소비한 가운데, 1월 임시국회에선 반도체특별법 등 계류 중인 법안의 통과를 노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야는 1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8일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하고 1월 임시국회를 곧바로 열어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열고 주요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오는 11일 집권여당의 원내대표 보궐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에, 다음주엔 양당 모두 원내 진용을 갖추고 본회의에 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이 새해 첫 법안으로 '2차 종합특검' 법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이어서, 국민의힘이 다시 필리버스터 전략을 들고 나올 가능성도 있다. 새해를 맞이했음에도 여야의 감정적인 대치가 이어지면서 민생·경제를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하는 입법부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도체특별법(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국민의힘이 주장한 반도체 연구개발 종사자 주52시간 근로 면제 조항 없이 반도체 인프라 지원과 세제 지원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담아 본회의에 부의돼 있다. 내란재판부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지난해 연말 필리버스터 정국에 상정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며 본회의 상정과 처리만 기다리고 있다.

업계에선 글로벌 반도체 강국들이 직접 보조금 등 각종 지원을 등에 업고 기술 선점과 제조 역량 강화를 위해 발버둥 치고 있는데, 정작 우리 국회에선 정쟁에 휩싸여 골든타임을 허무하게 흘려보내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정치권이 떠들썩하게 연말에 집중포화를 했던 쿠팡에 대한 국정조사요구서도 처리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등 민주당 의원 133인은 ▲반복적 개인정보 유출 ▲입점업체 및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 계약 관행과 우월적 지위 남용 ▲물류 · 배송 노동자의 권리 침해와 과도한 노동 강도 ▲반복되는 산업재해와 안전관리 체계의 미흡 등 쿠팡이 일으켰다고보고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국민의힘도 쿠팡 연석 청문회 대신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했었던 만큼 협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장실은 전날 "8일 본회의를 열어 '쿠팡 국정조사요구서 보고' 및 주요 민생·개혁 법안을 상정해 처리하려 했으나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선출이 임박한데다 대통령 외교 순방 시기라는 점을 고려해 본회의 개최를 미룬다"며 "의장은 민주당 원내대표 선출 즉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해 이번 회동 무산으로 처리하지 못한 시급한 안건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1월 임시국회를 바로 열어 산적한 민생 법안을 최대한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2차 특검을 즉각 수용하고 민생 입법 처리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민생개혁 입법에 더욱 총력을 가하도록 하겠다"며 "1월 임시국회를 바로 열어서 산적한 민생 법안들을 최대한 조속히 처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 與 원내대표 후보 4인, 김병기·이혜훈 관련 입장 엇갈려

**한병도·박정, 김병기 판결 '신중론'**
**진성준·백혜련 "김 전 대표 탈당해야"**
**이혜훈 의혹엔 탐탁치 않아 하는 모습**

한병도 민주당 의원

진성준 민주당 의원

박정 민주당 의원

백혜련 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전이 막이 오른 가운데, 당 내부 최대 현안인 '김병기 전 원내대표 탈당'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의혹'을 둘러싸고 후보들간의 입장이 미묘하게 엇갈린다.

이해충돌·보좌진 갑질·공천헌금 수수 의혹 끝에 원내대표 직을 사퇴한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탈당할 의사가 없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당 내부에서도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탈당을 압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한병도·진성준·박정·백혜련 후보자(기호 순)들도 입장을 내놨다.

한병도 의원은 전날(7일) 모 방송에 출연해 김 전 원내대표의 거취와 관련해 "윤리감찰단에서 이미 감찰이 다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다"며 "이 사안이 윤리심판원에 가 있고, 김 의원의 소명까지 들어서 (징계) 결정이 12일에 날 것이다. 조만간 판결이 나니까 그 결과를 조금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고 신중론을 펼쳤다.

한 의원은 8일엔 라디오에 출연해 당 공천 헌금 의혹과 관련해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박정 후보도 한 방송에서 "당 지도부가 윤리심판원에 맡겨놨는데 이걸 뒤엎는 것도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반면, 진성준 후보는 당이 어려울 때 당을 먼저 생각하고 개인적 일은 뒤로 미뤄달라며 '선당후사'를 강조하며 김 원내대표의 탈당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백혜련 후보는 "이 건은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의원직 사퇴까지 해야 할 문제"라며 날을 세우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각종 의혹에도 청문회를 지켜본다는 입장이지만, 너무 많은 의혹이 나오는 탓에 원내대표 후보자들도 탐탁치 않아 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오는 19일 즈음에 실시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너무나 많이 최소한 이틀은 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성준 후보는 모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대통령께서 이념과 진영을 떠나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기용하겠다는 실용주의 인사 원칙을 갖고 계시고 당도 당연히 존중해야 되지만 하루가 멀다하고 여러 의혹이 터져 나온다"며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에 반대 했다는 정치적 입장도 문제지만 갑질·부동산 투기 의혹, 투자 관련 문제가 연일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병도 후보는 라디오 방송에서 "정문 절차가 끝나면 그 다음에 또 최종 청와대에서 판단을 할 것"이라며 "이것도 하나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청문 절차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청문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고 강조했다.

백혜련 후보도 한 방송에 출연해 "인사청문회에서 의혹에 대한 해명이 되는지, 국민이 이 후보자 사과를 수용하는지 여부를 가지고 최종적인 판단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고, 박정 후보는 "이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에 대한 것은 검증을 통해야 하며, 무조건 여당이라서 방어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능력이 충분한지 상대적으로 도덕적 흠결을 (능력이) 커버할 수 있는가를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태홍 기자

# 국민의힘, 인사 논란에도 '윤민우 윤리위원장' 임명

**부정선거 음모론 동조 등에도 선출**
**당 지도부, 윤 위원장 내정 의혹**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가족이 연루된 '당원게시판 사건' 징계 여부를 논의할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8일 정식으로 출범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윤리위원장으로 뽑힌 인사에 대한 논란이 있음에도, 그대로 임명을 강행했다. 이에 한동훈 전 대표의 징계 절차에 가속이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날 윤민우 윤리위원장 및 윤리위원 임명안을 의결했다. 앞서 윤리위원 7명 중 3명의 사퇴로 공백이 생긴 것과 관련, 이날 윤리위원 2명을 추가로 선임해 새 윤리위 구성을 마쳤다.

국민의힘은 지난 5일 윤리위원 7명의 선임안을 의결했는데, 언론을 통해 명단이 공개되면서 이력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윤리위원 3명이 곧바로 사의를 표명했고, 이후 나머지 윤리위원들의 호선에 따라 윤민우 위원장이 선출됐다.

이날 최고위에서는 윤리위원 명단 유출에 대한 비판이 쏟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장동혁 대표도 "명단 유출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엄중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윤리위원이 공개된 사안에 대해 여러 최고위원이 깊은 우려를 표하셨다. 당의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행위가 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데 많은 공감대가 있었다"며 "엄중하게 사안을 보고 있다는 공감대가 있었지만, 추후 방향에 대해 구체적 얘기가 오간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또 일각에서 이날 임명된 윤민우 윤리위원장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국민의힘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윤 위원장은 과거 한 매체 기고문을 통해 "개딸들의 이재명 사랑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경멸과 질투, 미움과 연동되어 있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또 부정선거 음모론에 동조하는 시각을 보이기도 했다.

이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를 밀어내려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 위원장을 사실상 위원장으로 '내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날 최 수석대변인은 윤 위원장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이의 제기하거나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최고위원회에서 나온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서예진 기자 syj@

# 與 을지로위원회, '쿠팡 바로잡기 TF' 운영

**불공정거래 행위, 책임 회피 겨냥**

더불어민주당의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 쿠팡의 반복적인 불공정거래 행위와 사회적 책임 회피 문제를 겨냥한 '쿠팡 바로잡기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TF 구성 및 운영 소식을 밝히며 쿠팡이 그동안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배달앱 수수료 및 광고비 부담의 입점업체 전가 ▲퀵커머스 사업 확장에 따른 도소매 상권 침탈 ▲입점·납품업체 영업정보를 활용한 PB상품 판매 ▲광고·마케팅 비용 강요 등 불공정거래 ▲택배노동자 과로사 및 산재 은폐 의혹 등 갖가지 문제를 일으켜 왔다고 설명했다.

을지로위는 이 같은 문제들이 개별 사건이나 일시적 논란에 그치지 않고, 거대 플랫폼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회피해 온 구조적 문제라고 진단했다.

쿠팡은 3300만명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국회 전체회의나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지만 쿠팡은 핵심 자료 미제출, 사건의 은폐·축소, 책임을 회피하는 답변 등 이른바 '버티기식 대응'으로 일관하며 국회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을지로위는 "최근 쿠팡이 미국 내 로비 활동 등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관련 입법 논의를 지연시키려 했다는 정황까지 드러나고 있다"며 국내 시장에서 발생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제도 개선을 저지하려는 태도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박태홍 기자